



## 국가의 국운을 결정할 수 있는 한미FTA에서 국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 협상 동향은 어떠한가?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2차 본 협상이 지난 6월과 7월 미국 워싱턴 및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이번 본 협상은 그 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지적하고 우려한 여러 쟁점사항이 그대로 협상 의제로 채택되고 미국이 요구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양보하였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제1차 협상에서 농업부문은 미국의 무조건적인 개방 요구와 한국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요구 등의 현안에서 상당한 대립이 이루어져 농업과 관련이 많은 위생검역 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이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7월 2차 협상에서 각 품목별 양허안 마련과 협정문 내용을 작성할 때 미국은 농업 부문의 국영무역 및 수입이익부과금 철폐와 한국의 약값 재산정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등 대폭적인 개방과 제도 변화를 요구하였다.

한편 국영무역은 정부가 경제·무역 정책상 민간업체에 수입을 맡길 수 없는 전략상품(쌀·소금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제 수입 업무는 정부가 위임한 민간 무역업자가 대행한다. 수입이익부과금은 국내의 가격차에 따른 이익을 민간 낙찰자에게 모두 넘겨 주는게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인정되는 제도이다.

## 한미FTA 협상에서 국회는 제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

한·미 FTA협상은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2월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공청회는 개최 20여 분만에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무산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 날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체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된 공청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개시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 유보 등 4대 현안 과제를 모두 수용하여 국익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국회는 속수무책으로 지켜 볼 뿐이었다.

더욱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협상 의제에 대해 국회에 제대로 보고조차 않은 상황에서 협상은 더욱더 가속을 내고 있다.



## □ 통상협상에서 선진국 국회의 역할은 어떠한가?



정부는 협상 전략 노출 우려를 내세우며 한-미 FTA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예를 보면 공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미국 정부는 미국 의회가 협상의제에서 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검증하고 본 협상의 관련 동향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FTA가 미국의 상업적 이익과 정책 목표의 달성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할지, 지방정부에 미칠 효과와 미국과 한국의 환경·노동권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도 양국 의회는 협상의 전 과정을 보고 받고 의견을 제출한다. 특히 호주는 의회 내 조약심의위가 비준동의에 앞서 30~100일간 협상안을 집중 심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내법 반영을 거부할 수 있다.

## □ 통상협상은 행정부가, 모든 책임은 국회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밀주의'와 무대책, 정략적인 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무조건적인 FTA 추진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 어떠한 법적·제도적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제도적 공백 상태가 한·칠레 FTA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의 FTA 협상 결과에 대해 비준 여부만을 결정하는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이다. 실제 행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비밀리에 협상한 결과를 국회의 비준을 해주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준을 해주지 않으면 국제신인도 하락을 자초한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결국 정확한 FTA의 협상 내용 및 예상 피해 규모, 정책 대안 등

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입법·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 통상절차법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2차 협상이 종결된 뒤 가동된 FTA 특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제 우리당 소속 10명의 특위 위원 가운데는 ‘FTA 체결 지지 의원 모임(가칭)’에서 이름을 바꾼 ‘한미 FTA 포럼’ 소속 의원이 3명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위원들도 이미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사람들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경우 아직까지도 특위 위원들을 구성하지 못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향후 통상 협상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을 서둘러 제정하여 FTA 실무협상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정부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특히 한-미 FTA를 포함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FTA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연구결과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본협상 개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헌법 60조1항(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통상협상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한·중 마늘협상, 쌀끝이협정 등 행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통상협상의 불신에서 기인된 것이다.

